

충남리포트 제157호

ChungNam Report

2015. 3. 20.



CONTENTS

〈요약〉

1.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지역 격차
2.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3.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mrcho@dankook.ac.kr

본 글에서는 사회적 통합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중장기적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요약

-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저성장과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새로운 양상의 지역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그간 균형발전은 지역정책의 최상위 목표규범이었지만, 국가 경쟁력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산업경제 중심의 지역간 배분, 그것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적 배분 혹은 분산방식으로 일관되어 왔음.
- 그 결과 지역간 자원과 기회의 배분이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배분됨으로써 이른바 공간부정의(空間不正義)로서 공간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사회와 사람의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음
- 새로운 균형발전은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실체적 정의가 공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칙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공간적 스케일(광역, 지역, 장소 등)에 따라 차등화해야 함. 그러나 어떤 스케일에 맞추던 앞으로의 균형발전은 '사람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함.
 - － 정의(Justice)의 지역화에 초점을 맞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함.
 - － 유형별 지역격차의 특성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이 강구되어야 함.
 - － 균형발전에서 지역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되어야 함.
 - － 균형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역량 강화가 중요함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지역 격차 ◀

01

- 한국사회의 갈등 중에서 지역갈등은 빈부갈등 다음으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
- 지역격차로 인한 지역갈등은 사회적 통합과 형평성 구현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공간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아 국가 선진화마저 어렵게 함.
 - 지역격차와 갈등의 완화 없이는 한국사회의 통합적 발전, 나아가 국가 선진화는 불가능함.
- 지역격차의 지속으로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역 간에 차이가 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함.
- 삶의 기회와 권력자원의 불평등과 결부될 때, 지역격차는 지역을 범주로 하는 사회집단 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사회적 안정과 통합성을 저해하게 됨.
- 또한 지역격차는 지역별 인적·물적 자원의 부적절한(비효율적) 활용을 초래해 국토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선진 공간 시스템으로 전환을 가로막음.
- 이러한 지역격차는 시장요인(기업투자, 노동시장 등)보다 정부의 부절적인 정책에 의해 야기 되고 지속된다고 보는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임.
 - 우리나라 헌법 제120조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가의 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 그간의 균형발전은 지역정책의 최상위 목표구범이었지만, 국가 경쟁력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산업경제 중심의 지역간 배분, 그것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적 배분 혹은 분산방식으로 일관되어 왔음
- 공간정의로서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절차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가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에서 제대로 담보가 되지 않았음. 또한 경제산업과 시장의 문제로서만 다루어 왔을 뿐, 사회와 사람의 문제는 균형발전정책에서 제대로 다루어오지 못했음

1) 공간정의에 입각한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

- 향후 균형발전은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실체적 정의가 공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칙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공간적 스케일(광역, 지역, 장소 등)에 따라 차등화해야 함.
- 큰 스케일의 공간(광역의 지역적 차원, 예, 수도권-비수도권)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담보된 산업적, 경제적 측면의 분배적 정의 구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면, 작은 스케일(소단위 지역이나 생활권적 차원, 예, 역내, 도농간)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담보된 사회복지적, 문화적 측면의 실체적 정의 구현에 역점을 두어야 함.
- 그러나 어떤 스케일에 맞추던 ‘사람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이 되어야 함. 통합적 균형발전은 사람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산업경제와 생활경제, 경제와 사회, 시장과 삶, 인간과 자연, 중앙과 지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상호 교접(cross-fertilization)하면서 통합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지역간, 지역내 격차가 해소되는 지역발전을 의미함.

2) 통합적 균형발전의 방향

● 정의(Justice)의 지역화

-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대등하고 공정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사회적 통합이 실현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모든 지역은 사회적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받아 대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되 (존 롤스의 ‘평등의 원칙’의 지역화), 불균형은 모든 지역에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더라도 특히 최소발전지역(과 주민들)에 최대혜택이 보장될 때 용인될 수 있음(존 롤스의 ‘차등의 원리’의 지역화).

● 지역격차 특성별 대응

- 지역격차의 양상은 최근 들어 다원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예, 영호남,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 등), 특성도 전통적인 정치적·경제적 격차에서 일상생활의 격차로 바뀌고 있음. 상이한 차원의 지역격차로 인해 단일한 정책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사회적 통합의 공간적 과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형별 지역격차의 특성에 대응하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함.

● 지역 취약계층의 보호

- 균형발전은 그간 주로 물리적 시설(예, 산업시설, 인프라 등)이나 기능 개선에 역점을 뒀지만, 앞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교육, 의료, 복지, 참여, 문화향수 등 사람중심의 의제를 우선 다루도록 해야 함.
- 지역격차는 사회계층문제와 결부되어 같은 지역의 격차문제라도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인, 여성, 낙후주민 등 사회약자들에 의해 더 크게 인지되고 있음. 균형발전은 이들 지역 약자를 보호하고 권능화(empowerment)하는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함.

● 통합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역량의 강화

- 지금까지 격차해소는 중앙에 의한 하향적·할당적·시혜적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론 지역 인재의 육성이나 자치역량의 강화를 통해 지역내부로부터 발전이 지속될 수 있는 상향적·내발적·자발적 방식으로 바뀌어야 함.
- 지역역량과 발전정도에 따라 자원과 혜택이 차등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조세제도나 지원 제도의 강구가 필요하고, 지역 간 자발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가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함.

1) 정의(Justice)의 지역화: 통합적 균형발전의 제도화● **지역 통합적 균형발전 계획의 수립**

- 균형발전이 단순한 지역의 경제적 역량이나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간, 지역내 사회통합의 촉진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통합적 균형발전’에 관한 중장기적 로드맵이 먼저 작성되어야 함. 이를 바탕으로 개별 정책들이 단계별, 연계적으로 추진되고, 또한 그 성과가 입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 ‘지역통합적 균형발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법정계획으로 작성하고, 중기적으로 관련법을 갖추어 법정계획으로 전환시킴.
- (가칭)사회통합발전을 위한 비전계획 작성 : 사회통합위원회가 주관하여 5년 단위의 ‘(가칭)사회통합발전을 위한 비전계획’을 작성하되, 내용적으로 사회통합에 관한 목표, 전략, 주체별 추진 과제와 방법 등을 제시하도록 함.

● **지역차별 시정제도 도입**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①항을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역에 의한 차별을 겪지 않을 헌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
- 이 규정이 단순히 선언적 수준을 벗어나려면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먼저 지역통합적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해야 함. 나아가 현저한 지역격차로 인해(예, 접근 가능한 범위에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의 부족) 지역주민들이 적절한 지역적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경우, 이의 시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 ‘지역차별시정제도’는 바로 이를 제도화하는 것임.

- 동 제도는 일상생활에서 지역간, 지역내 격차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겪는 피해, 불이익, 차별 등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민원으로 ‘사회통합위원회’에 제출
- 사회통합위원회의 담당부서(‘지역차별시정센터’를 설치)가 접수된 지역차별 시정사안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부서나 기관으로 송부하여 처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가칭)지역통합발전위원회 설치

- 지역통합적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장할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사회통합위원회 내에 지역통합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지역적 차원의 사회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통합과 균형발전이 통합되어야 하는 바, 사회통합위원회 내의 지역통합 업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업무가 통합되어야 함.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지역위원회를 ‘지역통합발전위원회’로 전환시켜 양 업무를 함께 관장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함.

2) 지역격차 특성별 대응

● 지역발전 목표등급제 도입

- 균형발전정책은 지역의 유형 구분으로부터 시작됨.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정확히 평가하고 등급화한 뒤 그에 상응한 정책처방이 적용되어야 함. 통합적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지역등급은 발전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EU에서 실시했던 지역구분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현 EU지역정책(2007-12)에 의하면 ‘Objective 1’ 지역은 ‘낙후지역의 발전과 구조조정 촉진’ 대상 지역이고, ‘Objective 2 지역’은 ‘구조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경제·사회적 전환 지원’ 대상 지역이며, ‘Objective 3 지역’은 ‘유럽고용전략의 일환으로 직업훈련 및 고용훈련과 같은 인적 자원의 개발’ 대상 지역임.

- 이에 견주어, 우리나라에선 지역간 경제력이나 생활수준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개발정책이나 재정지원 등이 적용·배분되고 있음. 대표적 지역정책인 지역산업진흥정책의 경우, 비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지역에 1/n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군을 단위로 하여 지역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별 목표등급을 부여하는 ‘지역발전 목표등급제’를 제안함.

● 도농융합 5대 과제 추진

- 도시에 대한 농촌의 격차 완화를 위한 5대 과제로 ‘교육의료’, ‘생활여건(특히 주거)’, ‘일자리’, ‘주민안전’, ‘소도시(원도심)재생’을 선정해 중앙과 지방이 역할 분담을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 하도록 함. 5대 과제별 실행 프로젝트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결부시켜 주민들이 직접 선정하는 ‘주민체감형’ 과제로 제한하고, 추진성과에 대해서도 ‘주민체감지표’를 발굴해 주민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권역별로 ‘도농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위 과제를 통합적으로 운영.

● 수도권 입지의 지방영향평가제 실시

-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서 허용되는 사업이라도 면적과 투자액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예: 1만㎡, 100억 원 이상) 수도권 입지로 인한 지방의 투자 및 고용창출의 기회, 기존 활동 등에 끼치는 영향, 즉 ‘지방영향평가’를 실시해 영향이 크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선별적 허가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 한시는 수도권 집중이 약화되고 기존 입지구제방식에서 계획적 관리방식으로 전환될 때까지를 의미함.

● 역내 격차 완화 선도사업 추진

- 근자에 들어 지역격차는 지역간 격차에서 지역내 격차로 옮겨가면서 격차의 특성 또한 인프라나 경제적 여건에 관한 것에서 일상생활에 관한 것으로 바뀌고 있음.
- 역내 격차는 성장여하에 따라 성장지역과 낙후지역, 지리적 위치에 따른 강남·북 혹은 동서간 지역, 공간위계에 따라 도심과 주변, 소득계층에 따라 고소득지역과 저소득지역 등으로 지역이 나누어지면서 나타남.
-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내에서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격차사례를 선정해 이를 집중적인 방식으로 완화하는 ‘역내 격차 완화 선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지자체별 ‘역내격차완화 선도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되, 지역부담(매칭)을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의 부담(보조금)을 최대한 늘려야 함.

3) 지역취약계층(공간약자)의 보호

-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은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장소의 번영(prosperity of place)’에 주로 역점을 두었으므로, 그로 인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제한적이었음.
- 사회적 통합을 전제로 하는 균형발전은 이제 ‘사람중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공간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더욱 강화시켜야 함.
- 지역별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누려할 최소한의 삶의 질과 이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지역 미니멈(regional minimum)’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광역 시도별 지역미니멈 제정) 광역 시도별로 내셔널 미니멈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지역 주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지역 미니멈(regional minimum)’을 헌장으로 정해 공표하고, 지역의 자치행정은 이를 달성하는 것을 책무가 되도록 해야 함.
 - (지역최소기준의 3대 요소) 지역최소기준에는 ‘기본소득’, ‘필수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치참여권 및 권리구제’ 3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 서비스의 지역간 균등화
 - 사람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결핍을 겪지 않으면서, 동시에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가 지역간에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함.
 -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s)는 어떤 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실시되는 서비스를 말함. 넓은 뜻으로는 사회보험이나 공적 부조 등의 사회보장, 교육이나 주택에 관한 지원서비스, 좁은 뜻으로는 아동복지나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함.

● 일자리 복지의 지역간 균등화

-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 할 정도로 최근 들어 일자리 창출이 지역별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일자리 창출의 지역간 격차가 지역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드리는 지역간 격차의 새로운 양상으로 떠오르고 있음.
- 일자리 창출은 시장경제부문과 사회경제부문으로 나누어 정책화하도록 함. 전자는 시장의 제품 수요를 기업활동으로 이끌어내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후자는 사회적 서비스를 새로운 개념으로 기업활동으로 연결시키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함. 전자는 지방중소기업 육성, 후자는 사회적 기업육성을 중심으로 함.

● 지역 취약계층의 보호와 권능화: 사람친화적 균형발전 추진

- 여성(특히 홀부모 가장), 노인(특히, 독거노인), 저소득층(특히 노동력 상실 저소득층 가구주), 비정규직(특히 가장 혹은 가구주)을 ‘4대 지역 취약 계층’으로 분류해, 각종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의해 제공되는 각종 혜택과 지원(예: 재정투자, 채용, 세제지원 등)이 우선 배정되도록 해야 함.
-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취약계층을 위한 혜택은 단순한 지원이나 보호로 그쳐선 안 되고, 스스로 자립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능화하는 부분까지 프로그램화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광역 시도별로 조례로 (가칭) ‘지역취약계층 권능화 계획’을 수립하면, 산하 기초지자체는 이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구체화하는 실행전략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4) 지역 역량 강화

- 지역균형발전은 각 지역들이 내발적인 발전역량을 갖추는 때 비로소 지속가능해짐. 지역역량 형성(local capacity-building)은 포지티브 정책으로 향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함.


- 지역역량 형성은 크게 세 가지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첫째는 인재 육성 혹은 지역 노동력 확보, 둘째는 산업 혹은 지역경제의 육성, 셋째는 지방자치의 강화임.

● 인재지역할당제의 전면 실시

- 사람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재육성이 핵심이라면 인재지역할당제는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국가고시 및 중앙정부 공무원(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광역 지역인구 비례로 지역 할당 실시.
- 공기관 및 공기업 직원 채용에서 지역인재를 최소 30% 채용.
- 중앙정부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비수도권 거주 인사를 30% 이상으로 함.

● 자치역량 강화

- 내발적 발전은 결국 지방주체들이 스스로 발전을 조직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 특히 정치제도적 역량의 여하에 의해 좌우됨. 단순한 물리적 ‘분산’을 넘어서 ‘분권’을 통한 지역의 내생적 역량 강화를 보다 중요하면서 효과성이 있는 발전정책으로 간주되고 있음.
- (지방이양일관법 제정)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의 인사, 재정, 조직 등 권한의 일괄 이양하도록 해야 함. 이렇게 해서 현재 ‘2할 자치’를 ‘4할 자치’로 확대시키도록 해야 함.
- (자치입법권 부여) 지방자치법 22조(조례)에서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규정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으로 개정하여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확대시켜줘야 함.
- (자치재정권 확대)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고 부문별 통합보조금 성질의 포괄보조금을 확대하며, 분권교부세를 재편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중앙정부의 부담을 높이도록 해야 함. 중장기적으로 지방에 대해 과세권을 부여해야 함. 

조 명 래 교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031-8005-3323 mrcho@dankook.ac.kr

본 글은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충남발전연구원, 2013 전략과제)”의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 재수정한 것임

◆ 참고 자료 ◆

- 김은경(201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접경·낙후지역 지원방안’, 경기도·인천광역시 주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허와 실’ 토론회 발제문(2012.10.4).
- 문정호(2011). ‘공정사회의 공생 국토·지역발전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KRIHS ISSUE PAPER 2011-27.
- 변창흠(2012). ‘수도권 낙후 접경·낙후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의 한계와 과제’, 경기도·인천광역시 주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허와 실’ 토론회 발제문(2012.10.4.).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2012,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상생발전방안’(2012.11.29.,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내부 워크숍 파워포인트 자료).
- 조명래(2011). ‘만들어진 공간 불평등, 지역격차’, <<복지동향>>(참여연대), 157호.
- 이덕재(2008).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간 선순환구조형성방안 모색>>(국회용역과제보고서).
- 한국사회학회·한국지역학회(2011). <<지역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 (사회통합위원회 연구보고서).
- 홍철, 2012, ‘지역정책: 어떻게 해야 하나?’ (2012.9. 국회발표 파워포인트 자료).
- OECD(2009). Regions at a Glance 2009.

충남리포트(2014년~현재)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밭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홍성호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방안	오명택·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	이호중	2014.07.16
2014-23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정만·고승희	2014.07.17
2014-24	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최은희	2014.07.21
2014-2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김양중	2014.07.23
2014-26	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장종익	2014.07.28
2014-27	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	주운현	2014.07.30
2014-28	충남 정책 키워드(3농혁신, 사회적경제)의 SNS 데이터 분석	임화진	2014.07.31
2014-29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유병덕·최영화	2014.08.05
2014-30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양중	2014.08.07
2014-31	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	박철희	2014.08.11
2014-32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	김찬규 외	2014.08.21
2014-33	지방 3.0 시대,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정창수	2014.09.11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34	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김순은	2014.09.16
2014-35	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	박 경	2014.09.18
2014-36	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김홍기	2014.09.23
2014-37	충청남도 행복기움지원단 활성화 방향과 과제	김용현	2014.09.25
2014-38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언	변창흠	2014.09.30
2014-39	충청남도 주민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과 전략	안성호 · 곽현근	2014.10.02
2014-40	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헌 외	2014.10.08
2014-41	충남의 산업단지, 공공디자인으로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이충훈	2014.10.16
2014-42	충청남도과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박경철	2014.10.17
2014-43	농촌의 에너지자립, 산림바이오매스에서 찾다: 일본 산림구원대 활동	박춘섭	2014.10.30
2014-44	일본 내발적 발전의 도시형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4.11.06
2014-45	충남 지역 현실이 반영된 교통수요분석 DB 구축과 관리 필요	김형철 · 김원철	2014.11.12
2014-46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이해와 도입방안	김원철 · 유준일	2014.11.20
2014-47	한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김양중	2014.11.26
2014-48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강마아	2014.11.26
2014-49	한중 FTA에 따른 충남 수산업의 위기와 기회	김종화	2014.11.26
2014-50	한중 FTA, 충남 지역발전 전략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박경철	2014.11.26
2014-51	서해안 시대, 충청남도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방안	채진원 외	2014.12.03
2014-52	충남도와 중국 하이룽장성 교류협력전략	박인성	2014.12.04
2014-53	인권 선진으로 나가는 충남의 정책과제	성태규	2014.12.10
2014-54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건강피해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명형남	2014.12.17
2014-55	충남 대형국책사업 발굴 및 유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종윤 · 임재영	2014.12.25
2015-01	충남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5.01.05
2015-02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신동호	2015.01.13
2015-03	충청남도 문화예술 비전과 발전전략	박철희	2015.01.26
2015-04	충청남도 행정리 단위 마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특성	최은영 외	2015.02.03
2015-05	충청남도 도서(島嶼) 특성과 발전방향	한상욱	2015.02.12
2015-06	충청남도 행정동·리 마을의 최근(2005~2010년) 변화와 시사점	최은영 외	2015.02.17
2015-07	2015년 충남 GRDP 전망 - GRDP 100조 시대 충남의 새로운 도약	김양중	2015.02.25
2015-08	글로벌 차원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정준호	2015.03.05
2015-09	신균형발전을 위한 다층적 균형정책	박배균 · 김동완	2015.03.12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